

시민센터와 풀뿌리재단 설립을 환영한다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시민사회의 일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풀뿌리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센터와 풀뿌리재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건강한 시민사회를 꿈꾸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힘을 실어준다는 데서 환영합니다.

그동안 시민운동이 사회개혁 및 현안 중심의 활동에 치중하면서
시민사회 내부다지기에 소홀했던 위기적 징후가 표출되는 상황에서
시민운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풀뿌리에 희망을 걸며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은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한 일입니다.

오늘의 이 모임은
추진위원회가 거침없는 활동을 펴나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유형무형의 다양한 형태의 기여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지역공동체사회건설은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 공공부문의 지원 그리고
민간재단 및 기업사회공헌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추진 중인 시민센터와 풀뿌리재단은
시민사회운동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주장(advocacy)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정부지원, 그리고 기업의 지원을 받게 하는
정부 및 기업과 시민사회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간기구(intermediary)>로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일찍부터 활용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인프라입니다.

중간기구란 시민운동이 필요로 하는

자금조달, 정보제공, 인재육성, 관련법규 및 세제정비 등의 기능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발전되어 있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대개의 경우 지역재단이나 민간공익재단들이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특성상 기금모금과 배분은 직접 하고 있으나

여타 과제는 시민운동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행하고 있는 것은
풀뿌리운동체를 지원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실정을 감안할 때

추진위원회는 센터와 재단의 설립추진과 병행해서
이뤄내야 하는 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주도의 산업우선사회에서 시민참여형의 파트너십사회로의 전환과
기부문화의 민주화를 위한 정비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자율적 기탁금이라는 명목으로

민간기부금을 거둬들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민사회공익재단이 경쟁할 수 있는가?

시민사회운동의 육성을 위한 법률이나 세제가

우리의 기부환경과 시민사회활동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정부지원을 과연 얻어낼 수 있는 것인가?

정부 또는 기업과의 바른 협력관계를 위한 <협약>체결은 가능한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는 시민이 세상을 바꾸는 세기라고들 합니다.

보다 나은 삶의 조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진 시민의 연대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면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

못 이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시민센터추진위원회의 건투를 빕니다.